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유럽연합(EU) 회원국의 여론과 그 형성 배경에 관한 비교 연구*

강유덕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문요약〉

이 연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EU의 대러시아 제재에 대한 유럽의 여론을 국가별로 비교하였다. 특히 EU의 대러시아 강경 대응에 대해 EU 회원국이 외교·안보와 경제적 측면에서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회원국 간 인식의 차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식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EU 내 주도적인 여론은 러시아를 강력히 비판하고, 강력한 제재를 동의하고 있지만, 각국의 입장은 자국에 예상되는 경제적 피해와 에너지 사용 현황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큰 경제적 피해를 우려하는 국가일수록 가치 중심의 강경 대응보다는 경제적 피해를 고려한 대응을 선호하는 모습을 보이며, 화석연료 사용 비중이 높은 국가도 마찬가지로 경향을 보인다. 반면에 경제적 피해를 감내해낼 수 있으며, 재생에너지의 비율이 높아 에너지 위기에 보다 잘 대응할 수 있는 국가는 강경 대응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래 러시아에 대한 친밀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경제적 상황의 고려를 주장하는 여론이 상대적으로 강했지만, 친미성향의 국가들은 가치 중심의 강경 대응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안보 측면에서는 이 전쟁으로 인한 안보 위협을 더 크게 느끼는 국가일수록 가치 중심의 정책 기조를 지지하는 여론이 높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주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랜 유럽국 전통이 있는 북유럽 3국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유럽의 기본 가치에 대한 위협으로 판단하고, 군사 지원에 찬성하는 여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회원국별로 처한 외교·안보와 경제적 상황, 그리고 그 인식이 다르다는 점은 EU의 대러시아 대응을 분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EU가 대러시아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회원국 간의 연대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회원국 간 경제적 부담과 외교·안보적 인식의 격차를 메꿀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조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단일한 정책 대응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주제어: 유럽연합(EU),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제재, 여론, 요인

* 이 논문은 2022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2S1A5A2A03056912).

** 한국외국어대학교 Language & Trade 학부 부교수/Center for European Studies 방문교수, Weiser Center for Europe and Eurasia, University of Michigan(E-mail: ydkang@hufs.ac.kr)

I. 서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은 정치와 경제에 있어 큰 변화에 직면했다. 정치적 측면(외교·안보)에서 유럽은 유럽연합(EU) 또는 회원국 차원에서 외교·안보 정책을 강화하고, 특히 군비 확충에 나서고 있다. 스웨덴과 핀란드는 70년간 유지해 오던 외교적 중립노선을 포기하고 2022년 5월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을 신청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측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은 그동안 군비 확충에 미온적이었지만, 이번 전쟁을 계기로 국방비 투자 확대 쪽으로 선회했다. 이러한 변화는 지난 수십 년간 평온을 유지했던 유럽에 큰 지정학적 변동, 더 나아가 냉전의 가능성을 예고한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유럽-러시아 간의 에너지 수요-공급자 관계가 깨지면서 에너지 공급망의 대변환이 진행 중이며, 이 과정에서 에너지 가격 및 전반적인 물가상승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로부터 가장 많은 에너지를 수입해 왔지만,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아예 없애는 것을 목표로 수입원 전환, 녹색 전환의 가속화 등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변화는 단기적으로 공급충격을 불러일으켜 유럽의 불황과 경기침체로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빠르게 회복하던 유럽경제는 당분간 저성장이 불가피하며, 연쇄효과로 인해 다른 지역의 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대응으로 EU는 강도 높은 대러시아 경제 제재를 실시했다. EU는 러시아 중앙은행의 EU 역내 자산을 동결했고,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주요 은행들을 국제금융결제시스템(SWIFT)에서 배제시켰다. 또한 러시아 국영방송의 EU 역내 송출을 금지했고,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석탄, 석유, 천연가스) 수입을 대폭 줄임과 동시에 중기적으로 수입 중단을 선언했다. 개별 국가 차원에서는 많은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군사 장비를 제공했다. 특히 독일, 북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동안 해외 분쟁에 군사개입을 꺼려온 점을 고려하면 이 전쟁에 대한 유럽의 입장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이후 EU의 제재가 외교적, 상징적 조치에 그쳤다면, 이번의 제재는 전면적, 대립적 성격을 갖는다. 즉 EU 및 회원국의 대러시아 제재는 매우 강경한 것으로 지난 20여 년간 간헐적으로 표출되었던 지정학적 긴장과는 성격이 다른 것이다.

EU 내에서 러시아에 대한 규탄과 강경 대응 기조는 확고하며, 유럽의 전반적인 인식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유럽의 안보와 가치(민주주의, 개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런데 이러한 조치로 인해 EU 회원국들은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공급의 불안과 고물가와 같은 경제적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생 이후 1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이 전쟁과 EU의 대러시아 제재에 대한 여론은 어떠할까? 이러한 질문을 제기하는 이유는 대러시아 강경 대응조치를 둘러싸고 EU 회원국 간에 이견이 표출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외교·안보 분야에서 EU의 정책 결정은 EU 이사회(외교장관 회의)가 주도하며 논의 주체의 성격상 전원 합의로 결정된다.¹⁾ 원칙적으로는 한 국가의 완강한 반대 또는 거부에 의해 전체 결정이 좌우되거나,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며, 합의 도출을 위한 교섭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맥락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회원국 단위의 여론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EU의 정책분야 중 상대적으로 결속력이 약한 공동외교안보정책(CFSP: 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이 최대한의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관성과 더불어 회원국의 지지가 필수적이다. 회원국 단위의 여론은 해당 국가의 정부가 어떠한 결정을 선호하는지, 더 나아가 EU의 정책을 예상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그동안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갈등과 EU-러시아 관계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외교·안보 측면에서는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이후 EU의 대러시아 정책의 특징과 구조적 취약성에 관해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Dempsey 2022; Schmidt-Felzmann 2014; Schult et al. 2014; Siddi 2018a; Roth 2009). 경제 측면에서는 EU-러시아 간의 무역관계, 특히 에너지 수요-공급관계에 관한 지정학적 우려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Boute 2022; Casier 2011, 2016; Kuzemko 2014; Siddi 2018b). 특히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의 안보환경이 급변하면서 EU의 외교·안보 정책과 에너지 및 경제안보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다(Anghel & Erik Jones 2022; Blockmans 2022; Erciyas & Soydemir 2022; Götz & Staun 2022; Osička & Černoch 2022). 이러한 해외 연구의 흐름에 맞춰 국내에서도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유럽의 지정학적 긴장과 EU-러시아 에너지 관계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강유덕 2017; 김연규 2016; 박상철 2014; 서동주·윤익중·이성규 2021; 안상욱 2013; 온대원 2015).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는 급변하는 유럽의 안보상황에 대해 유럽의 시각을 다룬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1) EU 이사회(Council of the EU) 중 외교장관 회의인 Foreign Affairs Council을 통해서 결정된다. EU 조약 제24조 1항은 공동외교안보정책의 결정방식을 전원일치로 규정한다.

있다(김용민·진활민 2022; 김철민 2022; 김현정 2022; 배병인 2022).²⁾

이러한 학문적 노력의 연장선에서 이 연구의 목적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에 대한 EU의 대응 정책에 대해 유럽 시민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유럽인들은 이 전쟁을 유럽의 안보에 대한 존재론적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대러시아 제재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에 대한 유럽 여론의 평가는 어떠한가? 유럽 각국은 강경한 대응 정책으로 인해 파생되는 경제적 피해를 감내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가? 이 연구는 Eurobarometer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우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유럽 시민의 인식과 여론을 살펴보고, 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식별, 분석한다. 이를 통해 회원국 간에 존재하는 견해 차이와 그 배경을 확인하고, 향후 EU 차원의 정책형성이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지를 예상하도록 한다.

서론에 이은 이 연구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생 이후 EU의 대러시아 제재를 분석한다. 특히 EU의 강경 대응에 따라 EU-러시아 간 경제 관계가 상호의존에서 단절 관계에 진입하는 상황을 관찰한다. 제Ⅲ장에서는 Eurobarometer의 설문조사를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유럽 내 여론을 살펴본다. 또한 회원국별 여론을 살펴봄으로써 국가별로 존재하는 차이를 확인한다. IV장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EU의 대응 정책에 대한 회원국의 인식과 이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 단위의 변수를 가설에 근거하여 설정한 후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결론인 제Ⅴ장에서는 본문의 분석 결과를 서술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EU의 대러시아 대응조치가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지를 고찰한다.

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에 미친 영향

1. EU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2014년 3월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하자 EU는 미국과 함께 대러시아 경제제재를 실시했다. 반면에 이 제재는 양측의 경제의존도 등을 고려한 연성제재(soft

2) 러시아의 시각을 분석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에 대한 러시아 시각을 소개한 연구로는 강정일(2019), 장세호(2022a, 2022b), 정재원(2022), 계성훈(2022)이 있다.

sanction)로 병합 조치에 관련된 인사의 자산 동결, 크립과 세바스토폴에 대한 수입금지, 러시아 일부 금융기관의 금융활동 제한 등으로 이루어졌다. 유럽-러시아 간 에너지 수요-공급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EU의 제재에 대한 러시아의 맞대응도 EU산 농산품의 수입금지에 한정되었다. EU와 러시아가 상호 간에 제재를 부과한 이후에도 유럽의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는 감소하지 않았고, 러시아도 총수입의 1/3을 유럽(EU-27+영국)으로부터 수입했다.

EU의 대러시아 경제 제재는 공동외교안보정책(CFSP)을 통해 전원 합의로 결정된 것이지만 회원국별 입장에는 차이가 있었다. 가령 독일, 영국을 비롯하여 북유럽 3국과 발트 3국은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강경한 태도였지만,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은 당시의 제재 수준을 적절한 것으로 보았다. 이탈리아, 헝가리, 그리스, 오스트리아 등은 오히려 제재 철회를 주장했고, EU 집행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푸틴 대통령과 정상급 회동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대러시아 경제제재에 대해 회원국별로 입장이 다른 이유는 대러시아 경제관계 및 에너지 의존도, 지정학적 위치, 러시아에 대한 역사적 경험 등에 있어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Shagina 2017).

〈표 1〉 2014년 이후 EU의 대러시아 제재에 대한 회원국별 입장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의 상황)

입장	국가	이유
강경한 입장 (제재 강화)	독일, 영국, 스웨덴, 폴란드, 발트 3국, 덴마크, 핀란드	- 영국, 덴마크: 친미 외교 노선 - 독일: 밀접한 대러시아 경제관계와 별개로 경제제재를 주도 - 스웨덴, 핀란드, 발트 3국: 러시아 우려
온건한 입장 (현행 유지)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크로아티아	- 프랑스 : 러시아와 적절한 관계 유지 - 스페인, 포르투갈: 지리적 원거리, 러시아의 부동산, 관광 투자 - 네덜란드: Malaysian MH17 격추 전까지는 경제적 측면에서 대러시아관계 양호
모호한 입장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불가리아	- 국내에서 지정학적 우려와 러시아와의 비즈니스 관계 때문에 정치 및 재계 엘리트, 미디어 등이 양쪽으로 분열 - 러시아에 대한 무역과 에너지 의존도, 자국 이익 중시 성향
친러시아 성향	이탈리아, 헝가리, 그리스, 키프로스, 오스트리아	- 제재를 철회를 주장하고, 푸틴의 입장을 옹호(개인 회담) - 러시아와 정치적, 역사적, 문화적, 종교적으로 얽혀 있음. - 에너지, 은행, 관광 등에서의 이해관계(오스트리아와 헝가리의 대러시아 가스 의존도는 각각 70%와 100%)
무관심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몰타	- 러시아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이 없고, 에너지 의존도 또한 없음.

출처: Shagina(2017)

반면에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모든 EU 회원국은 강경 대응으로 선회했고, EU는 단계적으로 제재 수위를 높였다. EU의 제재는 금융, 에너지, 운송, 국방, 원자재 등 광범위한 분야의 경제제재와 더불어 좀처럼 보기 힘든 미디어 송출금지 등 역대 최대 수준으로 구성되었다.³⁾ 가령 2월 28일~3월 9일에 발표된 3차 조치에서는 EU 역내에 투자된 러시아 중앙은행의 자산을 동결했고, Stutnik, Russia Today 등 러시아 정부의 지원을 받은 9개 러시아 방송의 EU 내 송출을 금지했다. 또한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주요 은행들을 국제금융결제시스템(SWIFT)에서 배제함으로써 금융분야의 해외 거래를 제한했다. 특히 이 기간에 EU 집행위원회는 2030년까지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수입을 중단하는 에너지 전환계획 ‘REpowerEU’를 발표했다. 이를 반영하여 4월과 5월에 발표된 5차, 6차 조치는 러시아산 석탄과 석유 수입을 중단할 것임을 발표했다. 에너지원에 대한 수입 중단 조치는 수십년 간 지속되어 온 유럽-러시아 간의 경제관계를 중단하는 것으로 EU가 러시아에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강압외교이다. 또한 EU의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감안할 때 EU 경제에도 큰 타격을 미칠 수밖에 없는 조치로 EU 회원국 간에도 수입 중단의 정도와 시점을 둘러싸고 큰 논쟁이 벌어졌다. 가령 내륙국으로 러시아로부터 파이프라인을 통해 석유를 수입해 온 헝가리와 슬로바키아, 러시아 에너지 기업에 의존도가 높은 불가리아는 전환 기간의 연장 또는 예외 적용을 주장하였다(Zachová et al. 2022).

〈표 2〉 EU의 대러시아 제재 조치

제재 패키지	날짜	주요 내용
1차 조치 (First Package)	2022년 2월 23일	-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 분리독립에 찬성표를 행사한 러시아 연방의회(Duma) 의원 351명과 27개 기관 및 개인에 대한 제재(비자금지, 자산 동결) - 도네츠크 및 루간스크 지역에 대한 경제 관계 제한 - EU의 자본 금융시장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접근성 제한
2차 조치 (Second Package)	2월 25일	- 푸틴 대통령 및 라브로프 외무장관의 자산 동결 - 러시아 국가안전이사회(NSC) 구성원 및 연방의회 의원 제재 - 경제제재의 영역 확대(금융, 에너지, 운송, 이중용도 상품, 수출금융, 비자정책 및 제재 대상 개인/단체)

3) European Council/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2023a).

제재 패키지	날짜	주요 내용
3차 조치 (Third Package)	2월 28일	- 러시아 중앙은행(CBR)의 EU 역내 자산동결 및 CBR과의 금융 거래를 금지(외환보유고 6,300억 달러 중 유로화 및 유로표시 파생상품 거래가 금지되고, EU 역내 CBR의 금융자산이 동결됨)
	3월 2일	- 러시아 국영방송(Stutnik, Russia Today)의 EU 역내 송출 금지 - 러시아 주요 은행 7개를 SWIFT에서 제외 - 우크라이나 침공에 협조한 벨라루스에 대한 제재
	3월 9일	- 벨라루스 은행 3개에 대해 SWIFT에서 제외 - 벨라루스 중앙은행과 거래 금지, 벨라루스-EU에 대한 금융자금 유입 제한, 벨라루스에 대한 유로화 표시 은행권 지급 금지 - 러시아에 대한 해상항법 및 통신장비 수출 금지 - 160명에 대한 추가 제재
4차 조치 (Fourth Package)	3월 15일	- 특정 국영기업과 전면적 거래 금지 - 러시아 개인 및 기관(entity)에 대한 신용평가 금지 - 러시아 에너지 프로젝트 투자금지(Rosneft, Gazpromneft, Transneft 등) - 고가 사치품 수출 금지(300유로 이상인 패션, 보석, 와인, 주류, 50,000유로 이상의 자동차) - 러시아 철강 수입금지(3개월 유예 후 적용) - 러시아에 대한 WTO 최혜국대우를 박탈(다른 국가와 협의)
5차 조치 (Fifth Package)	4월 8일	- 러시아 석탄의 EU 수입금지(EU는 전체 석탄 역외수입의 46%를 러시아에 의존, 러시아 전체 석탄 수출의 1/4) - 러시아 선적으로 등록된 선박의 EU 회원국 항구 입항 금지(의료품, 식품, 에너지 제외)
6차 조치 (Sixth Package)	6월 3일	- Sberbank와 2개의 러시아 은행을 SWIFT에서 제외 - 러시아 기업에 대한 회계, 자문 금지 - 6개월 이내에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고, 러시아산 정유 제품의 수입을 2022년 말까지 중단
7차 조치 (Seventh Package)	7월 21일	- 러시아산 금, 보석의 구매 및 수입금지 - 이중용도 품목 통제 강화 - 향만 접근 금지 연장 - 54명의 개인과 10개 단체에 대한 추가 제재
8차 조치 (Eighth Package)	10월 6일	- 러시아 석유의 제3국 수출 시 가격 상한선(price cap) 적용 - 군사 및 기술 강화에 전용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추가 수출금지 - 무역과 서비스에 대한 추가 제한 - 30명의 개인과 7개 단체에 대한 추가 제재
9차 조치 (Ninth Package)	12월 16일	- 드론 엔진, 이중용도 품목, 채굴 분야, 러시아개발은행, 광고 및 시장조사, 여론조사 서비스 금지 - 41개 러시아 매장에 대한 광고 금지 - 141명과 49개 단체에 대한 추가 제재
10차 조치 (Tenth Package)	2023년 2월 15일	110억 유로 규모의 수출금지 조치 - 무기 생산에 활용될 수 있는 47개 전자 부품에 대한 수출금지 - 개인과 단체(100여개)에 대한 추가 제재

출처: 강유덕(2022), 175-176; European Commission(2022a); European Council/Council of the European Union(2023a).

2. EU의 탈러시아 에너지 전략

EU 집행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불과 2주 만에 탈러시아 에너지 정책 패키지인 REPowerEU의 초안을 제시했고, 약 2개월의 조율을 거쳐 5월 중순에는 최종 정책제안서를 발표했다(European Commission 2022b, 2022c). 이 계획은 2022년 말까지 러시아산 석유와 석탄 수입을 중단하고, 늦어도 2030년까지는 천연가스 수입도 중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에 맞춰 에너지 공급과 수요를 재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공급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중동, 미국 등으로 수입처를 전환하고, 중기적으로는 풍력, 태양광, 바이오 메탄 같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늘린다. 수요 측면에서는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거나, 화석연료 소비량 자체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정책 패키지는 예상치 못한 사태에 의해 급조된 것이지만, 상당 부분은 EU가 추진하는 유럽 그린딜의 연장선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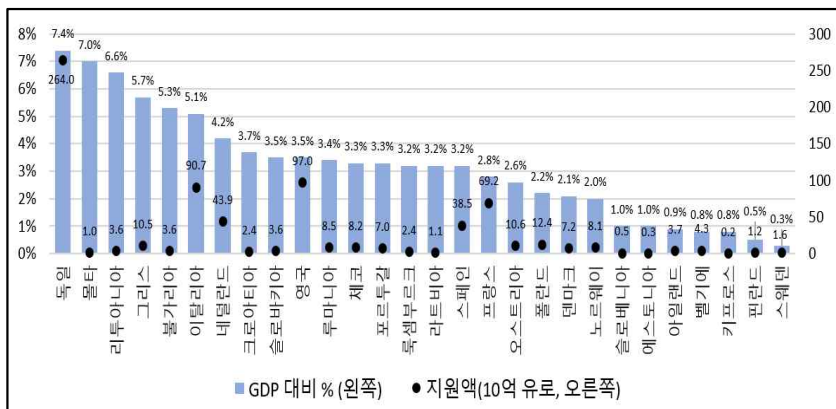
REPowerEU의 세부 계획으로 다양한 에너지 대책과 입법 조치가 진행되었다. EU 집행위는 2022년 3월 23일 ‘가스 저장 규정(Gas Storage Regulation)’의 입법안을 제출했고, EU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결정을 통해 불과 3개월 만에 입법 절차를 마쳤다(EU 2022a). 이 규정은 2017년의 입법화된 기존의 규정을 개정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는데, 2022년 11월 1일까지 각 회원국이 가스 저장 용량의 80%를 채울 것을 규정했고, 2023년 같은 시점까지는 90%를 채우도록 정했다. 또한 같은해 4월 7일에는 EU 차원의 가스 공동구매를 위한 ‘EU 에너지 플랫폼(EU Energy Platform)’을 설립했다. EU 집행위는 같은 해 10월 18일 ‘공동구매 메커니즘(Joint purchasing mechanism)’을 구성하기 위한 입법안을 제출했고, 불과 2개월 만인 12월에 EU 이사회(에너지 분야)의 합의가 도출되었다(European Commission 2022c). 또한 가스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Save Gas for a Safe Winter)에 따라 가스 소비량을 15% 이상 줄이는 규정이 입법화되었다(EU 2022b). 또한 EU 이사회는 긴급 규정(Emergency regulation)을 통해 정상시의 전력 사용을 최소 10%, 최대 수요 시기에는 5% 감소하는 목표를 정하고, 이를 위해 각 회원국이 가격을 조정하도록 제안했다(EU 2022c). 또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관련 기업이 초과 수입을 거둘 경우, 연대 기여 제도(solidarity contribution)를 통해 이를 환수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EU의 대러시아 제재 이후 러시아는 EU 회원국 중 13개국에 대해 가스공급의 중단 또는 축소했다. 5개국(불가리아, 폴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핀란드)에 대해서는 아예 가스공급을 중단했고, 가즈프롬

(Gazprom)은 9월 초에 노드스트림 1을 통한 가스공급을 중단했다. EU는 2022년 10월 중순까지 에너지 저장용량의 91%를 확보함으로써, 본래 11월 1일까지 달성하기로 했던 80%를 상회할 수 있었다.

EU는 코로나19 팬데믹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경제회복기금 중 에너지/기후변화 분야에 할당된 189억 유로를 수소 등 에너지 관련 산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에너지/기후변화 분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2021년 9월~2022년 11월의 기간 중 유럽 국가(EU 회원국, 영국, 노르웨이)들은 에너지 가격의 급등에 대처하기 위해 별도로 7,055억 유로를 지원했다(Sgaravatti et al. 2022). 특히 독일은 GDP의 7.4%에 달하는 2,640유로의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그림 1] 에너지 위기와 가계 및 기업 보호를 위한 국가별 재정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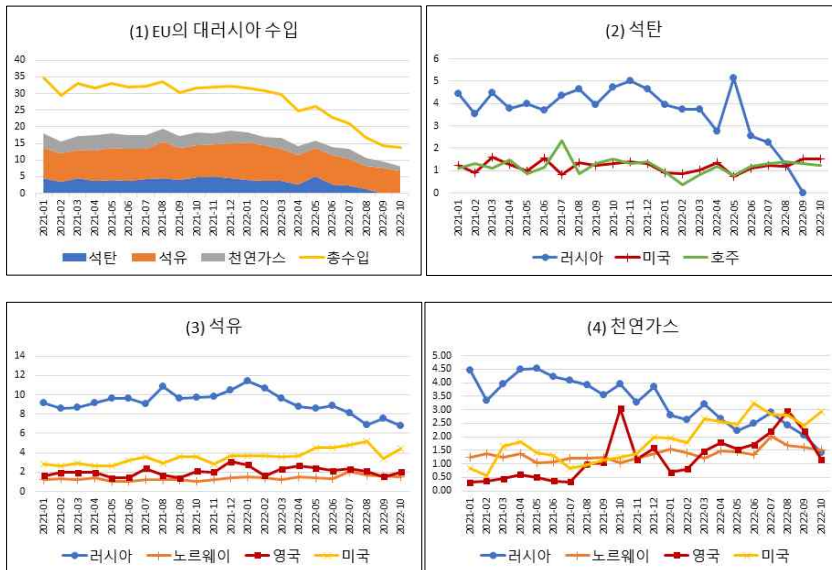
출처: Sgaravatti et al.(2022).

3. EU-러시아, 에너지 수요-공급자 관계의 변화

2022년 3월부터 EU의 대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수입은 급감했다(그림 2). 같은 기간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점을 고려하여 수량(무게) 기준으로 살펴보면 2022년 3~10월까지 기간 중 석탄, 석유, 천연가스는 전년 동기간 대비 각각 38.6%, 14.5%, 40.7%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9월 EU의 대러시아 석탄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99.5% 감소해서 사실상 수입이 중단되었고, 같은 해 10월의 석유와 가스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30.6%와 64.6% 감소

했다. 반면에 러시아를 대신해서 다른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급증했다. 특히 천연가스의 경우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2021년에는 대러시아 수입의 1/3에도 못 미쳤지만 가파르게 증가하여 2022년 5월부터는 대러시아 수입량을 상회하였고, 10월에는 두 배를 넘어섰다. 노르웨이와 영국으로부터의 수입도 급증하면서, 월별 기준으로 대러시아 수입 물량을 넘어섰다. EU 집행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러시아로부터 가스 수입은 2021년 총수입 중 41%에서 2022년 9월에는 9%까지 감소했다. 비중이 작았던 LNG 가스는 이제 32%를 차지해 가스 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European Commission 2022d, 3).

[그림 2] EU의 에너지 수입 현황 추이(단위: 백만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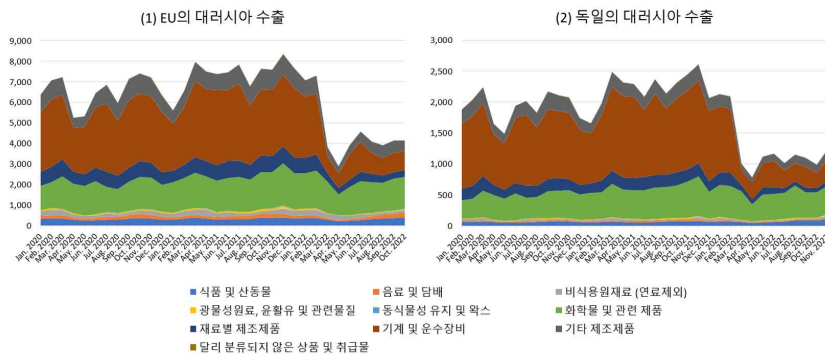
주: 석탄과 석유, 천연가스는 HS 4단위 기준으로 각각 2701, 2710, 2711을 의미함.

출처: Eurostat. <https://ec.europa.eu/eurostat/data/database> (accessed 19 Jan. 2023).

2022년 3월 이후 EU의 대러시아 수출도 급감했다(그림 3). EU는 러시아의 1위 무역 상대국이며, 하고 있다. 러시아에 있어 EU는 1위의 무역 상대국이며 2021년 러시아 총무역의 35.9%를 차지했다. 이는 러시아에 있어 2위인 대중국 무역의 2배 규모이며, 2~6위 국가로부터의 수입을 합친 규모와 같다. EU의 대러시아 수입이 에너지 중심으로 급감했다면, 대러시아 수출은 제조업 분야에서

감소세가 확연하다. 2022년 3~10월(8개월) 기간 중 EU의 대러시아 수출은 전년도 동기 대비 47.8% 감소했다. 모든 품목군에서 감소하였지만, 특히 EU의 대러시아 수출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기계 및 운수장비(SITC 7)’는 수출이 70.7% 감소했다. 거의 모든 회원국에서 이러한 현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 EU의 대러시아 수출의 30%를 차지하는 독일의 수출은 감소 폭이 더 크다. 독일의 대러시아 수출은 54.9% 감소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하로 줄었다. 특히 기계 및 운수장비 수출은 75% 감소했다.

[그림 3] EU와 독일의 대러시아 무역 추이(백만 유로)



주: 품목 구분은 SITC 1단위임.

출처: Eurostat. <https://ec.europa.eu/eurostat/data/database> (accessed 19 Jan. 2023).

이처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EU-러시아 간의 경제관계는 급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유럽경제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고물가 현상을 겪었다. 유로 지역의 물가상승률은 2022년 9월 유로화 체제 출범 이후 최초로 두 자리 숫자인 10%를 기록했다. 영국의 물가상승률은 이보다 앞선 7월에 G7 국가 중 가장 먼저 10%를 상회했다. 에너지와 식량의 외부의존도가 높은 발트 3국은 7월에 이미 물가상승률이 20%를 넘었고, 폴란드와 체코 등 중동부유럽 국가들도 15%가 넘는 고물가 현상을 겪었다. 고물가에 대응을 위해 유럽중앙은행(ECB)은 8년간 유지해 오던 제로 금리 정책을 사실상 종결하고, 2022년 7월~12월의 기간 중 세 차례에 걸쳐 총 1.75% 올렸고, 영국은행은 2021년 12월 이후 8차례 금리인상을 단행했다. 반면에 전례 없는 고물가 현상은 과잉 수요가 아닌, 공급충격에 의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통화정책을 통해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협소

할 수밖에 없다. 이에 전망기관들은 유럽의 성장률을 계속 하향 조정했다. 2021년 가을에 발표된 EU 집행위원회의 전망에서는 EU 경제가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4.3%와 2.5% 성장할 것으로 보았으나, 2022년 봄에는 성장률 전망이 각각 2.7%와 2.3%로 낮춰졌다(European Commission 2022e, 150). 2022년 11월에 발표된 전망에서는 2023년의 EU와 유로지역의 성장률 전망을 0.3%로 보았고, 독일과 영국은 각각 -0.6%와 -0.9%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경기침체를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European Commission 2022f, 166).

Ⅲ.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EU 회원국의 입장

1. 대러시아 제재에 대한 회원국 여론의 입장

전술한 EU의 대러시아 제재는 유럽이 이 위기를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비군사적 제재와 동시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의 군사지원이 이루어졌다. EU는 사상 처음으로 역외국에 대한 군사장비 및 무기 구입에 재정지원을 실시했다.⁴⁾ 무기 구매 지원을 금지하는 EU 조약을 우회하기 위해 EU 이사회는 정규 예산 외 수단으로 조성한 유럽평화기금(European Peace Facility)을 활용할 것을 결정했고, 지원 규모를 증액했다.⁵⁾ 이와 별도로 대부분의 EU 회원국은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을 실시했다.⁶⁾

그렇다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유럽 시민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어떠한 대응을 지지하는 것일까? Eurobarometer는 2022년 4월 13~20일 사이에 EU 27개국 26,053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다음 달인 5월에 발표했다. 이 시점은 EU의 대러시아 5차 제재가 발표된 직후이며, 본격적인 에너지 수입 중단 조치를 시행하기 이전이다. <표 3>은 EU의 제재 등 대응조치에 대한 찬반을 정리하였다. 경제제재부터 난민 수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대응조치에 대해서 찬성이 반대

4)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2/02/28/eu-adopts-new-set-of-measures-to-respond-to-russia-s-military-aggression-against-ukraine/>. (accessed 19 Jan. 2023).

5) European Council/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2023b).

6) 영국과 노르웨이, 대부분의 EU 회원국은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을 실시했다. EU 회원국 중에는 헝가리, 오스트리아, 몰타, 키프로스가 군사적 지원을 실시하지 않았고, 인도적 지원에 그친 것으로 판단된다.

보다 압도적으로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많은 찬성이 표출된 조치는 인도적 지원과 난민의 수용이다. 반면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과 러시아 국영방송의 송출금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63~66%의 응답자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폴란드는 인접국의 특성상 가장 많은 우크라이나 난민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90% 이상의 응답자가 난민 수용을 찬성한다는 의견을 표시했다. 특히 ‘전적으로 찬성’한다는 의견은 60% 이상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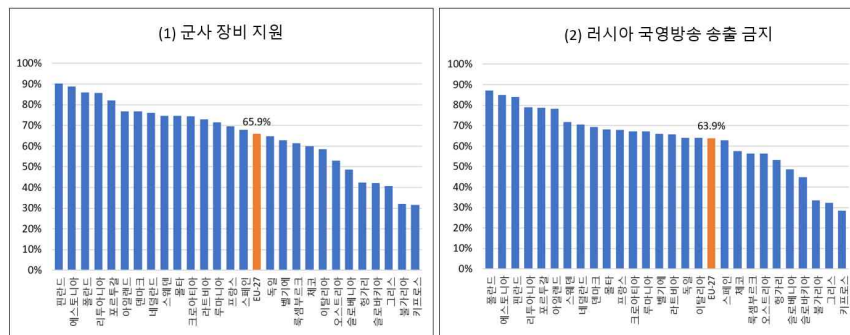
〈표 3〉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EU의 조치에 대한 찬성 여론

	전적으로 찬성 (1)	대체로 찬성 (2)	대체로 반대 (3)	전적으로 반대 (4)	찬성 (1)+(2)	반대 (3)+(4)
(1) 대러시아 경제 제재	54.1	22.7	10.5	8.5	76.8	19.0
(2) 러시아 재벌에 대한 제재	54.1	22.9	10.0	6.6	77.0	16.6
(3)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정지원	45.0	35.4	9.5	6.3	80.3	15.8
(4) 군사 장비 구매 지원 및 공급	36.2	29.7	13.3	14.0	65.9	27.4
(5) 전쟁피해자에 대한 인도적 지원	66.8	26.7	3.4	1.7	93.5	5.1
(6) EU 내 러시아 국영방송 송출 금지	41.5	22.4	15.4	12.9	63.9	28.3
(7) 난민의 EU 내 수용	55.1	33.3	6.0	3.1	88.4	9.1

출처: Eurobarometer(2022a)의 데이터를 활용한 저자의 구성.

이에 상대적으로 찬성 정도가 낮은 군사적 지원과 러시아 국영방송 송출금지 조치에 대한 회원국별 찬성 응답자의 비중을 살펴보았다(그림 4). 군사 장비 지원에 있어 러시아와 인접한 핀란드와 발트 3국,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에서는 78~90%의 응답자가 지지하는 견해를 밝혔다. 반면에 위치적으로 러시아와 가깝더라도 문화적, 경제적 유대관계가 강한 불가리아, 키프로스, 그리스 등에서는 찬성 여론이 50% 미만이며, 헝가리,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에서도 지지 여론이 높지 않았다. 이와 같은 여론의 추이는 앞서 <표 1>에 정리된 기존의 대러시아 제재(전쟁 발생 이전)에 대한 국가별 찬반 입장과 대체로 비슷하다. 러시아 국영방송 송출금지에 관한 설문조사에서도 거의 유사한 모습이 나타났다.

[그림 4]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EU의 조치에 대한 찬성 여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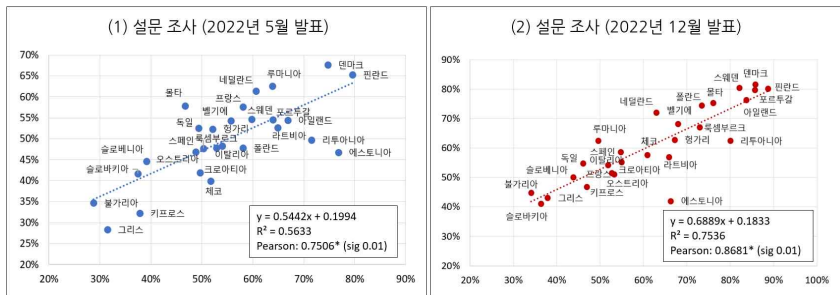
출처: Eurobarometer(2022a)의 데이터를 활용한 저자의 구성.

2. EU의 대러시아 대응조치에 대한 여론의 평가

전술된 대러시아 제재는 러시아와 오랜 기간 형성된 에너지 수요-공급자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며, 안보와 경제적 이익 중 안보에 중점을 둔 것이다. 그렇다면 EU와 회원국의 대러시아 조치에 대해 유럽 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이를 파악하기 위해 Eurobarometer가 2차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EU와 회원국의 대러시아 대응조치에 일반 시민의 만족도에 관한 결과를 살펴보았다. <그림 5>는 그 결과를 요약하였다. 가로축은 자국의 대응조치, 세로축은 EU의 대응조치에 대해 만족(매우 만족+대체로 만족)을 나타낸 응답자의 비중을 나타낸다. 두 개 차원의 만족도는 양 차례의 설문조사에서 모두 명확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데, 자국의 대응조치에 만족하는 경우 EU의 대응조치에도 만족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대로도 해석할 수 있다. 양 차례의 설문조사 결과가 유사하여 2022년 12월에 발표된 조사를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이 설문조사는 2022년 4월 17일~5월 16일의 기간에 실시된 것이며, 이 기간은 EU의 6차 제재 발표가 이루어진 시기이다. 따라서 대러시아 에너지의 수입 중단 조치가 발표된 시점이다. 회원국별 결과를 살펴보면 앞서 <그림 4>에서 살펴본 EU의 조치에 대한 찬성 여론과 크게 다르지 않다. 주로 북유럽 국가와 폴란드, 포르투갈, 아일랜드에서 대러시아 강경 대응조치에 대해 지지 여론이 강하지만, 불가리아, 그리스, 슬로바키아, 키프로스에서는 지지 여론이 상대적으로 약했다. 독일과 프랑스는 약 50~55%의 응답자가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다.⁷⁾ 즉 회원국별로 상당한 수준

의 만족도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EU와 자국의 대러시아 강경 대응에 대해 80% 이상의 시민이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는 회원국이 있지만, 그 비중이 30~40%에 불과한 회원국도 있다. 이러한 국가별 차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EU의 향후 대응을 파악하는데 큰 시사점을 준다. EU의 대러시아 대응조치와 에너지 전환계획이 EU 이사회에 결정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또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에 있어 각 회원국이 얼마나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인지를 예상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림 5]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회원국과 EU 차원의 대응에 대한 만족도



출처: Eurobarometer(2022a), Eurobarometer(2022b)를 활용한 저자의 정리.

3.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우려

EU의 대러시아 대응조치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강경한 조치이다. 이 조치에 대한 유럽 시민의 평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에 대한 평가와 안보적 위협에 대한 인식, 경제적 피해 등에 의해 결정된다. 이에 대한 파악을 위해 2022년 12월에 발표된 Eurobarometer의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⁸⁾ <표 4>는 우크라이나에서 전개된 전쟁에 대한 유럽 시민들의 인식을 정리하였다. 약 84%의 응답자는 이 전쟁을 EU의 안보에 위협으로 파악하고, 76%는 자국의 안보에도 위협이 된다고 보았다. 또한 80% 이상의 응답자는 민주주

- 7) Eurobarometer는 구서독과 동독지역의 설문조사를 따로 집계한다. <그림 5>는 양 지역의 설문조사 결과를 ‘독일’로 합친 것이다. 자국과 EU의 대러시아 대응조치에 대한 만족도는 구서독 지역보다 구동독 지역에서 훨씬 높게 나타났다.
- 8) 이 설문조사는 2022년 4월 17일~5월 16일 기간 중 EU 27개국 26,569명의 EU 회원국 국적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Eurobarometer 2022b).

의와 자유 등 유럽의 가치를 지키지 위해서 러시아에 단호하게 대항해야 한다고 답함으로써 가치지향적 입장을 표명했다. 이 전쟁을 계기로 안보 협력 및 관련 예산 증액 등 EU의 안보역량을 강화시켜야하며, 러시아에 대한 EU의 에너지 의존도를 시급히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여론의 입장은 에너지 가격 상승과 산업 전반에 미친 공급충격에도 불구하고 EU와 회원국이 탈러시아 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해 준 것으로 사료된다.

〈표 5〉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회원국 여론의 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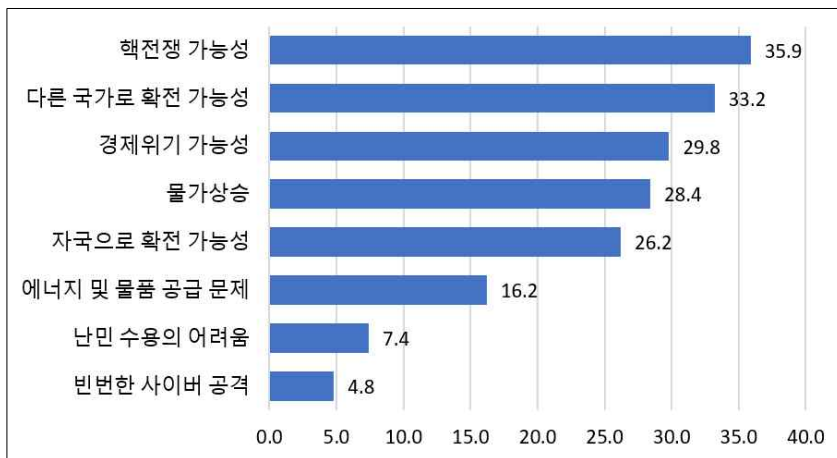
	전적으로 동의 (1)	대체로 동의 (2)	대체로 비동의 (3)	전혀 동의하지 않음 (4)	동의 합계 (1)+(2)	비동의 합계 (3)+(4)
(1) EU의 안보에 위협이 됨.	50.6	33.1	9.2	4.0	83.7	13.2
(2) 자국의 안보에 위협이 됨	40.4	35.8	14.7	5.9	76.2	20.6
(3) 러시아에 대항하는 것은 유럽의 가치를 지키는 것	46.4	33.9	9.3	5.2	80.3	14.4
(4) EU 차원의 안보협력을 강화해야 함	48.4	36.7	7.0	3.3	85.1	10.3
(5) EU 내에서 안보 예산을 증액해야 함	35.6	37.5	13.8	6.4	73.1	20.2
(6) EU는 가능한 한 빨리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줄여야 함	56.4	28.3	7.2	4.0	84.6	11.2

출처: Eurobarometer(2022b)를 활용한 저자의 정리.

유럽의 여론은 대러시아 강경 대응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였지만, 전쟁에 따른 우려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우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하였다. 30% 이상의 응답자는 핵무기 사용과 다른 국가로의 확전 가능성으로 가장 큰 우려로 지적했고, 경제위기와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에너지 공급에 관한 불안은 안보와 경제 위기에 비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설문조사의 시점(4~5월)과 EU와 회원국이 전방위적인 에너지 대책을 발표, 집행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EU가 전면적인 대러시아 제재를 발표하자 러시아는 EU 회원국 중 13개국에 대해 가스공급의 중단 또는 축소했다. 5개국(불가리아, 폴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핀란드)에 대해서는 아예 가스공급을 중단했다(European

Commission 2022d, 2). 대러시아 수입이 급감했지만, 미국, 노르웨이, 영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급증하면서 EU는 2022년 10월 중순까지 에너지 저장용량의 91%를 확보했으며, 본래 목표였던 11월 1일까지 80% 달성을 상회했다(European Commission 2022d, 2). 우크라이나 대량 난민에 대한 수용 어려움을 표시한 응답자는 7.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전쟁 발생 이후 우크라이나를 떠난 피난민 수는 29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중 폴란드에 150만 명이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⁹⁾ 반면에 폴란드인 응답자 중 피난민 수용에 대한 어려움을 우선순위의 우려로 답변한 비중은 7.1%로 스웨덴, 핀란드, 독일보다는 높았지만, 벨기에, 이탈리아, 프랑스보다 낮았고, 다른 비셰그라드 국가보다도 더 낮았다. 반면에 자국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택한 폴란드 응답자는 38.0%로 EU-27의 평균인 26.2%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그림 6]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가장 우려하는 점



주: 질문은 다음과 같으며, 2개의 답변까지 채택이 가능함. Which possible consequences of the war in Ukraine do you personally fear the most?

출처: Eurobarometer(2022b).

9) Statista(2023).

IV. EU 회원국 여론의 결정요인에 관한 고찰

1.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유럽 시민의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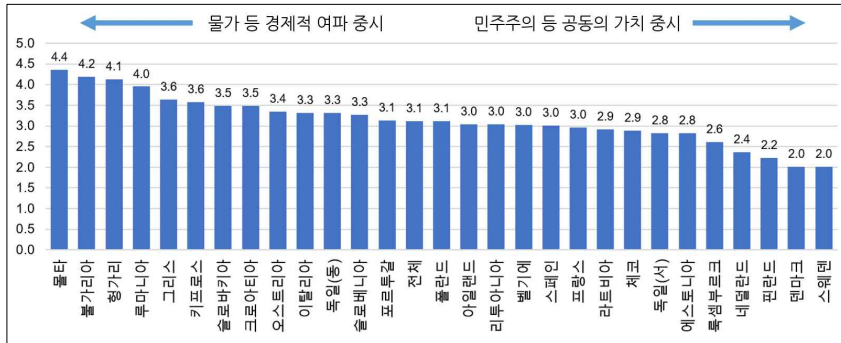
러시아에 대한 강경한 대응조치에 대해 EU 내의 여론은 지지 태도를 보인다. 반면에 회원국 별로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 이 장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유럽 시민의 인식과 대응조치에 대한 평가가 회원국별로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고, 그 요인을 분석한다.

앞서 <표 5>에 설명한 바와 같이 80% 이상의 유럽 시민들은 러시아에 강력하게 대항하는 것을 유럽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에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물가상승과 경제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러한 답변은 이 전쟁에 대한 유럽 시민의 입장이 가치 지향적 대응과 경제적 피해 우려 사이에서 결정됨을 의미한다. 만약 유럽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평가할수록 경제적 손실을 감내하려는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입장이 집단화하면 더욱 강력한 대러시아 대응조치를 추진할 수 있는 정치적 정당성이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가정하에 Eurobarometer의 설문조사 중 대러시아 대응조치에 있어 우선순위에 관한 다음과 같은 질문과 서열형 답변을 살펴보았다.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전쟁의 결과를 감안할 때 두 가지 사항 중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가?” 답변은 1에서 6까지 서열형으로 구성되는데, 물가와 생계비용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자유와 민주주의 같은 유럽의 가치를 지키는 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견해를 1, 안정적인 물가와 생계비용을 유지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견해를 6으로 하였다. 즉 이 질문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대러시아 강경 대응을 하는 데 있어 얼마나 경제적 비용을 감수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 비중을 합산하면 국가별 지표를 도출해 낼 수 있다. <그림 7>은 26,000여 명의 답변을 회원국별로 분류한 후, 가중평균하여 합산하였다. 모든 응답자가 유럽의 가치 방어(강경 대응)를 선택한다면 지표는 1이 되고, 안정적인 물가를 선택한다면 지표는 6이 된다.¹⁰⁾

10) 상세한 자료는 부록의 <표 6>에 수록하였다.

[그림 7]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회원국 여론의 입장



출처: Eurobarometer(2022b)를 활용한 저자의 구성.

<그림 7>에 나타난 결과는 앞서 살펴본 EU의 대러시아 대응조치에 대한 찬성 및 만족도 결과와 매우 유사하다.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등 주로 유럽의 북부지역에 있는 서유럽 국가의 여론은 민주주의와 자유 등에 가장 우선순위를 줌으로써 대러시아 조치에 있어 강경한 태도를 보인다. 반면에 몰타, 불가리아, 헝가리, 루마니아 등 일부 중동부유럽 또는 도서 국가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 경제적 문제에 더 중점을 두는 경향을 보인다. 중동부유럽 국가 중에서도 체코와 발트 3국은 가치 지향적 대응을 중시하는 답변이 많지만, 불가리아, 헝가리, 루마니아는 경제적 여파를 중요시하는 답변의 비중이 높았다.

2. 가설 설정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EU의 대응조치에 있어 회원국별 견해의 차이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 연구에서는 회원국의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회원국의 여론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가설 (2)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높을수록 러시아에 대한 강경한 태도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크다.

가설 (3) 러시아에 대한 친밀도는 EU의 대러시아 강경정책에 대한 회원국의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설 (4) 유럽의 안보 상황과 EU 차원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여론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먼저 <가설 1>은 대러시아 제재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EU 내 대러시아 제재 철회 여론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가정에 기초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강력한 대러시아 경제제재에 대해 80%에 가까운 유럽 시민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러시아 에너지 수입 중단은 공급충격을 불러일으켰다. 이 충격으로 인해 물가상승, 실소득 감소, 경기침체가 일정한 임계점을 넘는다면 유럽 시민의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전쟁에 대한 인식이 가치 지향적 관점에서 경제적 피해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면서, 전쟁의 빠른 종결을 위해 협상 등 타협을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이 변할 수 있다.

둘째로 <가설 2>는 유럽-러시아 간의 에너지 수요-공급자 관계가 EU의 대러시아 제재에 영향을 미친다는데 근거를 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유럽은 전체 에너지 수요의 25%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해 왔는데, 특히 러시아와 상대적으로 거리가 가까운 중동부유럽 국가들의 대러시아 의존도가 높았다. EU는 탈(脫)러시아 에너지 정책을 빠르게 추진 중이지만, 각 회원국이 인식하는 부담의 정도는 크게 다를 수밖에 없다. 유럽의 중동부에 있는 내륙국은 파이프라인에 의한 러시아산 가스와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 지리적 특성상 LNG 터미널 구축 등에 있어 불리할 수밖에 없다. 기존에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높았다면, 대러시아 강경 대응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크다. 반면에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높았던데 반해 대러시아 강경정책을 주장한다면 에너지 안보 불안을 압도할 만한 다른 차원(예: 외교·안보·군사)의 불안 요인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셋째,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에 대한 역사적, 문화적, 경제적 관계에 있어 차이가 있으며, 이는 대러시아 친밀도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3>은 이러한 친밀도의 차이가 대러시아 제재에 대한 국가별 입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가정한다. 러시아에 대해 우호적인 여론이 조성되어 있다면 공급충격 속에서 진행되는 EU의 대러시아 강경 대응에 대해 상대적으로 덜 지지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회원국별로 다른 대서양 관계에 관한 인식, 즉 친미성향도 유럽 국가들의 대러시아 정책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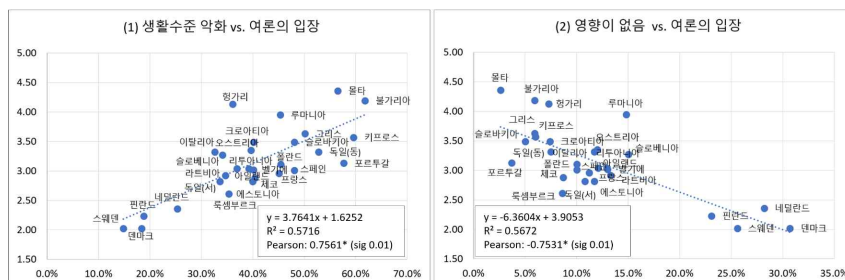
넷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유럽의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할수록 경제적 논리에 의지하기보다는 가치 중심의 사고방식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근거로 <가설 4>는 EU 차원의 외교·안보 정책에 관한 주장이 클수록 경제적 희생을 감수할 수 있다는 단호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가정한다.

3. 상관관계 분석에 따른 결정요인 도출

가설 (1)~(4)의 당위성을 확인하기 위해 시민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과 ‘가치 중심’ vs. ‘경제 중심’의 분류에 따른 국가별 지표(여론의 입장) 간의 상관관계를 도출하였다. 국가별 지표는 1에서 6 사이의 값을 가지며, 6에 가까울수록 가치 보다는 경제적 상황을 중시함을 의미한다.

<그림 8>은 경제적 상황과 여론의 입장 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가설 1>을 반영한 것이다. 왼쪽의 그림 (1)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생활 수준이 악화하였다고 응답한 비중과 경제적 문제를 중시하는 여론과의 관계를 보여준다. 이 관계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단일변수로써도 설명력이 높다. 생활 수준이 악화를 경험한 인구 비중이 높은 국가에서는 물가 급등 등 경제적 이유로 러시아에 대한 EU의 강경 대응을 덜 지지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유럽 국가 및 네덜란드, 독일(舊서독 지역)에서는 생활 수준이 덜 악화하였고, 민주주의 등 가치 중심의 의견이 우세하지만, 불가리아, 몰타, 키프로스, 루마니아 등에서는 반대의 경향이 나타났다. 추세선에서 가장 벗어나 있는 국가는 헝가리인데 경제적 피해가 더 큰 것으로 답변한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에 비해서 훨씬 경제적 영향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8>의 오른쪽의 그림 (2)는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없다고 답한 응답자 비중과 여론의 입장이 명확한 음(-)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설문조사 결과 경제적 피해가 적은 국가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가치 중심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뚜렷이 보인다.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등 북부유럽의 4개국은 그림 (2)에서 별도의 그룹을 형성하며 다른 국가들과 차이점을 보인다.

[그림 8]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와 여론 간의 상관관계



<가설 2>는 회원국의 에너지 사용 현황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전쟁 이전 러시아는 대부분 EU 회원국에 있어 1위의 에너지 수입국이었다. 석유와 천연가스의 수입은 총수입의 40%를 상회했고, 석탄의 수입은 70% 이상이었다. <그림 9>에서는 총에너지 사용(energy mix) 중 화석연료 사용 및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여론과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는지를 나타냈다. 왼쪽의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화석연료 사용 비중이 낮은 국가일수록 가치 중심의 대러시아 대응기조, 즉 강경한 모습을 보인다. 스웨덴과 핀란드,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와 프랑스가 이에 해당한다. 반면에 화석연료 사용 비중이 높은 국가들은 대러시아 강경 대응보다는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대응을 선호하는 의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 추세선의 위쪽에 있는 국가는 화석연료 사용 비중에 비해 더 경제적 상황 고려를 선호하는 국가로 주로 중동부유럽 국가들이 많다. 화석연료 사용 비중이 높은 국가 중 네덜란드가 예외인데, 이는 산유국의 특성 때문으로 사료된다. 오른쪽의 그림 (2)에서는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과 여론의 입장을 살펴보았다. 이 경우에는 반대로 음(-)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데,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가치 중심의 정책기조에 따라 대러시아 강경 대응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¹¹⁾ 이러한 결과를 고려할 때 각국의 에너지원별 사용 비중과 에너지 전환의 정도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대한 각 회원국의 입장과 일정 부분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¹²⁾ 반면에 높은 재생에너지 비중은 오랜 기간 추진해 온 정책의 결과이며, 에너지 안정성의 확보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게 된 결정적인 동기 중 하나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각국의 ‘대러시아 인식’과 ‘에너지 믹스’ 간에는 양방향의 영향력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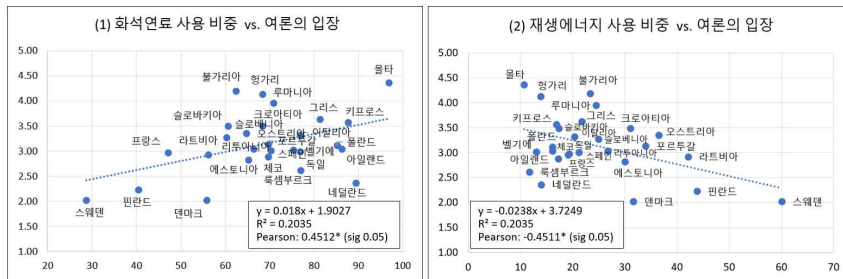
다음은 <가설 3>에 따라 러시아에 대한 이미지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여론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림 10>에 있는 두 그림의 가로축은 각각 러시아와 비교 대상으로써 미국에 대해 긍정적 이미지를 갖는다고 답변한 응답자의 비중을 나타낸다. 세로축은 전쟁에 대한 여론의 견해이다. 러시아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가진 국가일수록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 가치보다는 경

11)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이 높은 국가는 화석에너지 사용 비중이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그림 9>에 나타난 2개의 그래프는 사실상 같은 내용을 나타낸다고 볼 수도 있다.

12) 같은 분석을 에너지 의존도 또는 대러시아 에너지 수입 비중 등의 자료를 사용하여 실시하였을 때는 유효한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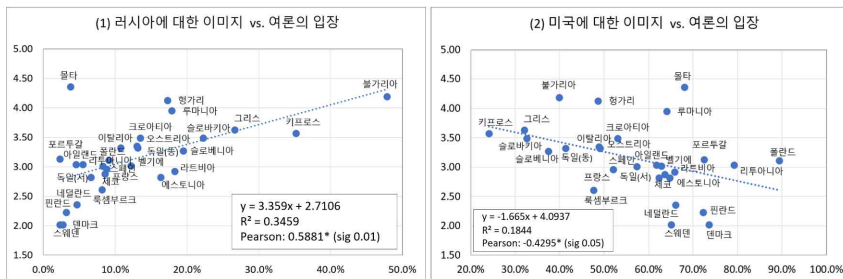
제적 문제에 더 많은 신경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가진 국가들은 일부 중동부유럽 국가(특히 불가리아)와 키프로스, 그리스이다. 중동부유럽 국가 간에는 러시아에 대한 선호도에 큰 차이가 있다. 반면 서유럽 국가 중 대부분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동시에 대러시아 대응 기조에 있어 가치 중심의 정책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오른쪽 그림 (2)에 나타난 미국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미국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국가일수록 가치 중심의 대러시아 대응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9] 에너지 사용 비중과 여론 간의 상관관계



출처: Eurobarometer(2022b)의 데이터를 활용한 저자의 구성.

[그림 10] 상대국에 대한 이미지와 대러시아 대응 여론 간의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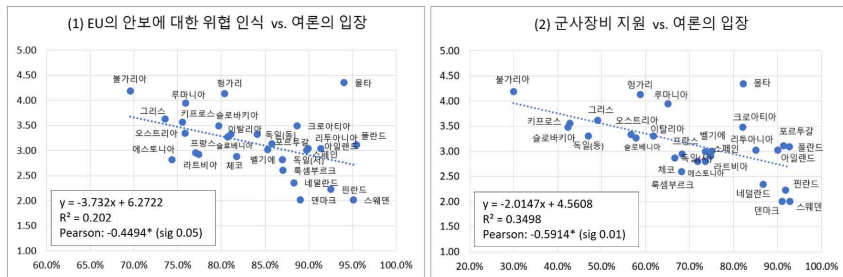


출처: Eurobarometer(2022b)의 데이터를 활용한 저자의 구성.

마지막으로 <가설 4>의 설득력을 살펴보기 위해 <그림 11>에서는 전쟁에 따른 안보 위협 인식과 전쟁에 대한 여론의 견해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왼쪽의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EU 차원의 안보 위협으로 느끼는 국가일수록 가치 중심으로 대응, 즉 더 강경한 대러시아 대응

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른쪽의 그림 (2)는 가로축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장비 지원에 동의하는 응답자의 비중을 나타냈다. 이 경우에도 피어슨 상관계수 값이 0.6에 가까운 비교적 명확한 음(-)의 관계가 형성됨을 확인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에 동의하는 국가일수록 국내 여론이 이 전쟁에 대한 대응조치에 있어 가치 중심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그림 11>에 표시된 두 그래프의 가로축인 ‘EU 안보에 대한 위협 인식’과 ‘군사 장비 지원 찬성’ 여론 간의 상관관계를 도출해본 결과 상관계수 값이 0.8에 가까운 매우 명확한 양(+)의 상관관계가 성립되었고, 계수 값의 설명력(R제곱)도 0.63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¹³⁾ 즉, 안보 위협에 대한 인식이 클수록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주장하는 여론이 형성된 것이다.

[그림 11] 안보에 대한 인식과 여론 간의 상관관계



출처: Eurobarometer(2022b)의 데이터를 활용한 저자의 구성.

V. 결론 및 시사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럽의 안보 지형을 완전히 바꿔버렸고, 많은 국가들은 군비 증강을 도모하고 있다. 유럽과 러시아 관계, 더 나아가 유럽과 러시아 사이에 존재하는 지정학적 공간의 긴장은 전쟁 이전의 상황으로 회복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약 대러시아 경제제재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지지하는 유럽 시민은 각각 77%와 66%에 이른다. 미국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75%의 미국인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지

13) <그림 8>에서 <그림 11>에 표시된 지표 간의 상관계수와 유의성에 관한 p 값 등은 부록에 수록하였다.

지하고, 65%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meltz et al. 2022a). 반면에 약 74%의 러시아인들은 우크라이나에서 진행되는 소위 ‘특별 군사활동(Special military operation)’을 지지한다는 견해를 보였다(Smeltz et al. 2022b).¹⁴⁾ 서방과 러시아의 여론은 이번 분쟁이 쉽게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알려준다.

이 연구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EU의 대러시아 제재에 대한 유럽의 인식을 살펴보고, 그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특히 EU의 대러시아 강경 대응에 대해 EU 회원국이 외교·안보와 경제적 측면에서 가진 인식을 살펴보고, 회원국 간 견해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을 식별, 분석하였다. 회원국별 입장이 다소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전쟁으로 인해 파생되는 외교·안보 위협과 경제적 충격이 다르기 때문이며, 지리적 요인을 물론, 역사적, 문화적 요인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에서는 이 전쟁에 대한 대응조치에 있어 가치 중심의 강력한 대응과 경제적 고려를 반영한 온건 대응(또는 타협) 기조로 구분한 후, 전쟁에 대한 인식과 경제여건 등을 중심으로 그 영향의 정도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EU 내 주도적인 여론은 러시아를 강력히 비판하고, 강력한 제재를 동의하지만, 각 회원국은 자국에 예상되는 경제적 피해와 에너지 사용 현황 등에 따라 다소 다른 반응을 보였다.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큰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는 국가일수록 가치 중심의 강경 대응보다는 경제적 피해를 고려한 대응을 선호하는 모습을 보이며, 화석연료 사용 비중이 높은 국가도 마찬가지로 경향을 보인다. 반면에 경제적 피해를 감내해 낼 수 있으며, 재생에너지의 비율이 높아 에너지 위기에 보다 잘 대응할 수 있는 국가는 강경 대응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래 러시아에 대한 친밀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경제적 상황의 고려를 주장하는 여론이 상대적으로 강한 반면, 친미성향의 국가들은 가치 중심의 강경 대응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안보 측면에서는 이 전쟁으로 인한 안보 위협을 더 크게 느끼는 국가일수록 가치 중심의 정책 기조를 지지하는 여론이 높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주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랜 중립국 전통이 있는 북유럽 3국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유럽의 기본 가치에 대한 위협으로 판단하고, 군사 지원에 찬성하는 여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14) 이 설문조사의 신뢰도를 문헌의 저자에게 직접 질의하였고, 저자는 충분한 신뢰도를 갖춘 설문조사라고 답변바 있다(2022/12/7).

이 연구의 한계는 설문조사의 특성 및 자료의 가용성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향후 관련자 인터뷰가 진행되고, 추가 설문조사가 진행된다면 여론의 변화 추이를 반영할 수 있는 더 정교한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 연구의 분석 결과는 일견 상식에 부합하는 단순한 발견일 수 있다.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해당 국가의 여론이 형성되며, 정책 기조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회원국별로 처한 외교·안보와 경제적 상황, 그리고 그 인식이 다르다는 점은 EU의 대러시아 대응을 분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EU의 공동외교안보정책(CFSP)은 EU 이사회의 전원 합의로 결정되기 때문에 각 회원국의 의견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또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은 NATO를 통해 조율이 이루어지지만, 각 회원국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바가 크다. 따라서 EU 회원국 간의 합의 도출은 대러시아 제재는 물론 이와 연계된 EU의 에너지 전환계획 추진을 위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회원국 간의 연대가 필요하지만, 회원국 간 경제적 부담과 외교·안보적 인식의 격차를 메꿀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조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EU는 대러시아 대응에 있어 단일대오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미국을 포함한 NATO 차원의 입장 수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참고문헌

국문 자료

- 강유덕. 2017. “EU의 對러시아 경제제재와 이후 EU-러시아 무역관계의 변화-對러시아 에너지 수입을 중심으로.” 『통합유럽연구』 8(2), 87-130.
- . 2022.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EU의 對러시아 에너지 의존 감축 정책: 실현 가능성과 그 여파에 대한 고찰.” 『통합유럽연구』 13(2), 147-189.
- 강정일. 2019. “러시아의 팽창정책과 우크라이나 사태의 원인: 지정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국가전략』 25(2), 147-171.
- 김연규. 2016. “EU 가스시장 자유화와 EU의 對러시아 에너지 전략 변화.” 『유럽연구』 34(4), 33-67.
- 김용민, 진활민. 2022. “우크라이나 사태로 바라본 유럽의 에너지, 식량안보.” 『EU연구』 62, 11-36.
- 김철민. 2022. “우크라이나 전쟁과 동유럽, ‘신냉전 무대’ 부상과 대응 현황.” 『EU연구』 63, 207-246.
- 김현정. 2022. “신홍안보로서의 경제안보 형성 과정과 유럽연합의 전략적 대응: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시기를 중심으로.” 『한독사회과학논총』 32(3), 3-29.
- 박상철. 2014. “유럽연합(EU)의 대 러시아 천연가스 수입의존도 감축 전략에 관한 연구.” 『EU학 연구』 19(2), 31-70.
- 배병인. 2022. “EU 외교안보정책의 딜레마와 우크라이나 전쟁.” 『국제학논총』 36, 5-36.
- 서동주, 윤익중, 이성규. 2021. “노드스트림-2 가스관 건설의 주요 쟁점과 유관국들의 전략적 입장: SWOT 분석을 적용하여.” 『러시아연구』 31(1), 119-163.
- 안상욱. 2013. “러시아 천연가스 도입에 따른 문제점 및 전망: EU와 한국의 사례 비교.” 『세계지역연구논총』 31(3), 93-118.
- 온대원. 2015.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유럽의 신안보질서.” 『EU연구』 40, 35-66.
- 장세호. 2022a. “2021~2022년 우크라이나 사태: 러시아의 목표·전략과 향후 전망 변수.” 『국제지역연구』 26(1), 3-23.
- . 2022b.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푸틴체제의 안정성 평

가.” 『국제지역연구』 26(4), 127-144.

정재원. 2022.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의 본질 - 러시아의 오래된 제국적 기획의 실현.” 『경제와 사회』 135, 150-197.

제성훈. 2022.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결정과 푸틴의 인식.” 『경제와 사회』 37(2), 161-192.

영문 자료

Anghel, Veronica & Erik Jones. 2022. “Is Europe really Forged through Crisis? Pandemic EU and the Russia-Ukraine War.” *Journal of European Public Policy*, <https://doi.org/10.1080/13501763.2022.2140820>

Blockmans, Steven. 2022. “Why the Ukraine Crisis should Push the UK and EU into a Tighter Embrace on Security Policy.” CEPS Policy Contribution (2022-03).

Boute, Anatole. 2022. “Weaponizing Energy: Energy, Trade, and Investment Law in the New Geopolitical Reality.”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16(4), 740-751.

Casier, Tom. 2011. “The Rise of Energy to the Top of the EU-Russia Agenda: From Interdependence to Dependence?” *Geopolitics* 16(3), 536-552.

_____. 2016. “Great Game or Great Confusion: The Geopolitical Understanding of EU-Russia Energy Relations.” *Geopolitics* 21(4), 763-778.

Dempsey, Judy. 2022. “Europe’s Fading Unity over Ukraine.” Carnegie Europe, April, <https://carnegieeurope.eu/strategiceurope/86948> (accessed 19 Jan. 2023).

Erciyas, Ahmet & Abdullah Soydemir. 2022. “Transformation of the EU Common Security and Defence Policy After 2014 Regarding Ukraine Crisis.” *Güvenlik Stratejileri Dergisi* 18/41, 1-30.

Eurobarometer. 2022a. *Flash Eurobarometer 506(EU’s Response to the War in Ukraine)*. ZA7871.

Eurobarometer. 2022b. *Eurobarometer 97.3*. ZA7888.

European Commission. 2022a. “EU Response to Russia’s Invasion of Ukraine.”

- <https://www.consilium.europa.eu/en/policies/eu-response-ukraine-invasion/> (accessed 17 Jan. 2023).
- _____. 2022b. *REPowerEU: Joint European Action for More Affordable, Secure and Sustainable Energy*. COM(2022) 108 final, March 8.
- _____. 2022c. *REPowerEU Plan*. COM(2022) 230 final, May 18.
- _____. 2022d. *State of the Energy Union 2022*. COM(2022) 547 final, October 18.
- _____. 2022e. *Economic Forecast 2022 Spring*, May.
- _____. 2022f. *Economic Forecast 2022 Autumn*, November.
- European Council/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23a. “Timeline - EU restrictive measures against Russia over Ukraine.” <https://www.consilium.europa.eu/en/policies/sanctions/restrictive-measures-against-russia-over-ukraine/history-restrictive-measures-against-russia-over-ukraine/> (accessed 17 Feb. 2023).
- _____. 2023b. “Timeline - European Peace Facility.” <https://www.consilium.europa.eu/en/policies/european-peace-facility/timeline-european-peace-facility/> (accessed 19 Jan. 2023).
- EU(European Union). 2022a. *Regulation (EU) 2022/103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June 2022 amending Regulations (EU) 2017/1938 and (EC) No 715/2009 with Regard to Gas Storage*.
- _____. 2022b. *Council Regulation (EU) 2022/1369 of 5 August 2022 on Coordinated Demand-reduction Measures for Gas*. ST/11568/2022/INIT.
- _____. 2022c. *Council Regulation (EU) 2022/1854 of 6 October 2022 on an Emergency Intervention to Address High Energy Prices*. ST/12521/2022/INIT.
- Eurostat. “Database.” <https://ec.europa.eu/eurostat/data/database> (accessed 19 Jan. 2023).
- Girardone, Claudia. 2022. “Russian Sanctions and the Banking Sector.” *British Journal of Management* 33(4), 1683-1688.

- Götz, Elias & Jørgen Staun. 2022. "Why Russia Attacked Ukraine: Strategic Culture and Radicalized Narratives." *Contemporary Security Policy* 43(3), 482-497.
- Kuzemko, Caroline. 2014. "Ideas, Power and Change: Explaining EU–Russia Energy Relations." *Journal of European Public Policy* 21(1), 58-75.
- Osička, Jan & Filip Černoch. 2022. "European Energy Politics after Ukraine: The Road ahead." *Energy Research & Social Science* 91, <https://doi.org/10.1016/j.erss.2022.102757>
- Roth, Mathias. 2009. "Bilateral Disputes between EU Member States and Russia." CEPS Working Document No. 319, August.
- Schmidt-Felzmann, Anke. 2014. "Is the EU's Failed Relationship with Russia the Member States' Fault?" *Dans L'Europe en Formation* (374), 40-60.
- Schult, Christoph, Jorg Schindler & Ralf Neukirch. 2014. "Russian Dilemma: Why EU Sanctions are a Bluff." *Spiegel International*, May 12, <https://www.spiegel.de/international/world/strong-eu-economic-sanctions-against-russia-unlikely-a-968913.html> (accessed 19 Jan. 2023).
- Sgaravatti, Giovanni, Simone Tagliapietra & Georg Zachmann. 2022. "National Fiscal Policy Responses to the Energy Crisis." *Bruegel*, November 29, <https://www.bruegel.org/dataset/national-policies-shield-consumers-rising-energy-prices> (accessed 19 Jan. 2023).
- Shagina, Maria. 2017. "Friend or Foe? Mapping the Positions of EU Member States on Russia Sanctions." *Commentary*, June 28, <https://www.europeanleadershipnetwork.org/commentary/friend-or-foe-mapping-the-positions-of-eu-member-states-on-russia-sanctions/> (accessed 17 Jan. 2023).
- Siddi, Marco. 2018a. "EU Member States and Russia: National and European Debates in an Evolving International Environment." *Finn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53.
- _____. 2018b. "The Role of Power in EU–Russia Energy Relations: The Interplay between Markets and Geopolitics." *Europe-Asia Studies* 70(10), 1552-1571.
- Smeltz, Dina, Craig Kafura & Emily Sullivan. 2022a. "Growing US Divide

on How Long to Support Ukraine.” *The 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December.

- _____, Emily Sullivan, Denis Volkov & Stepan Goncharov. 2022b. “Many Russians Support Negotiating End to Ukraine War but Not Letting Territory Go.” *The 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December.
- Statista. 2023. “Number of Ukrainian Refugees 2022, by Country.” Jan 2,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1312584/ukrainian-refugees-by-country/> (accessed 17 Jan. 2023).
- Sturm, Christine. 2022. “Between a Rock and a Hard Place: European Energy Policy and Complexity in the Wake of the Ukraine War.” *Journal of Industrial and Business Economics* 49, 835–878.
- Zachova, Aneta, Krassen Nikolov, Michal Hudec, Radovan Geist & Vlad Makszimov. 2022. “Russia’s sixth sanction package opens EU’s Pandora’s Box.” *EURACTIV*, May 5, <https://www.euractiv.com/section/energy-environment/news/russias-sixth-sanction-package-opens-eus-pandoras-box/> (accessed 17 Jan. 2023).

Abstract

An Analysis of European Public Opinion on the Russo-Ukrainian War and its Determinants

Yoo-Duk Kang ■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study examines public opinion in European countries on the Russo-Ukrainian war and the EU's sanctions against Russia. In particular, it investigates the different perceptions of issues related to the war in Ukraine in terms of security and economic implications and seeks to explain the differences in public opinions among European countries.

Leading public opinions in Europe strongly condemn Russia's invasion of Ukraine and agree to impose strong sanctions. However, there are different attitudes in public opinion depending on the expected economic damage and energy mix. Countries concerned about significant economic damage due to rising energy prices tend to prefer measures that take the economic impact into account rather than value-oriented hard-line responses. Additionally, countries with a high proportion of fossil fuel use also show the same tendency. On the other hand, countries that can endure economic damage and better respond to energy crises with a high share of renewable energy prefer a hard-line response. Countries with a favorable image of Russia have a relatively solid public opinion insisting on considering the economic situation, while countries with a pro-American tendency demand a hard-line response based on values.

In terms of diplomacy and security, it was found that the more countries feel the security threat from the war, the more public opinion supports a value-centered policy stance and insists on military aid to Ukraine. In particular, the three Nordic countries, which have a long tradition of neutrality, judge Russia's invasion of Ukraine as a threat to fundamental European values

and are more in favor of military aid to Ukraine than other countries.

This study provide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forecasting the EU's response to Russia. For the EU to maintain a strong stance against Russia, it is essential to secure solidarity among the members. The EU will need to coordinate the different economic burdens of its Member States and fully reflect the varying security awareness of European countries on its common security and defense policy. These efforts are necessary to maintain a solid and coherent policy stance on the war in Ukraine.

Key Words: European Union(EU), Russo-Ukrainian war, sanctions, public opinion, determinants

